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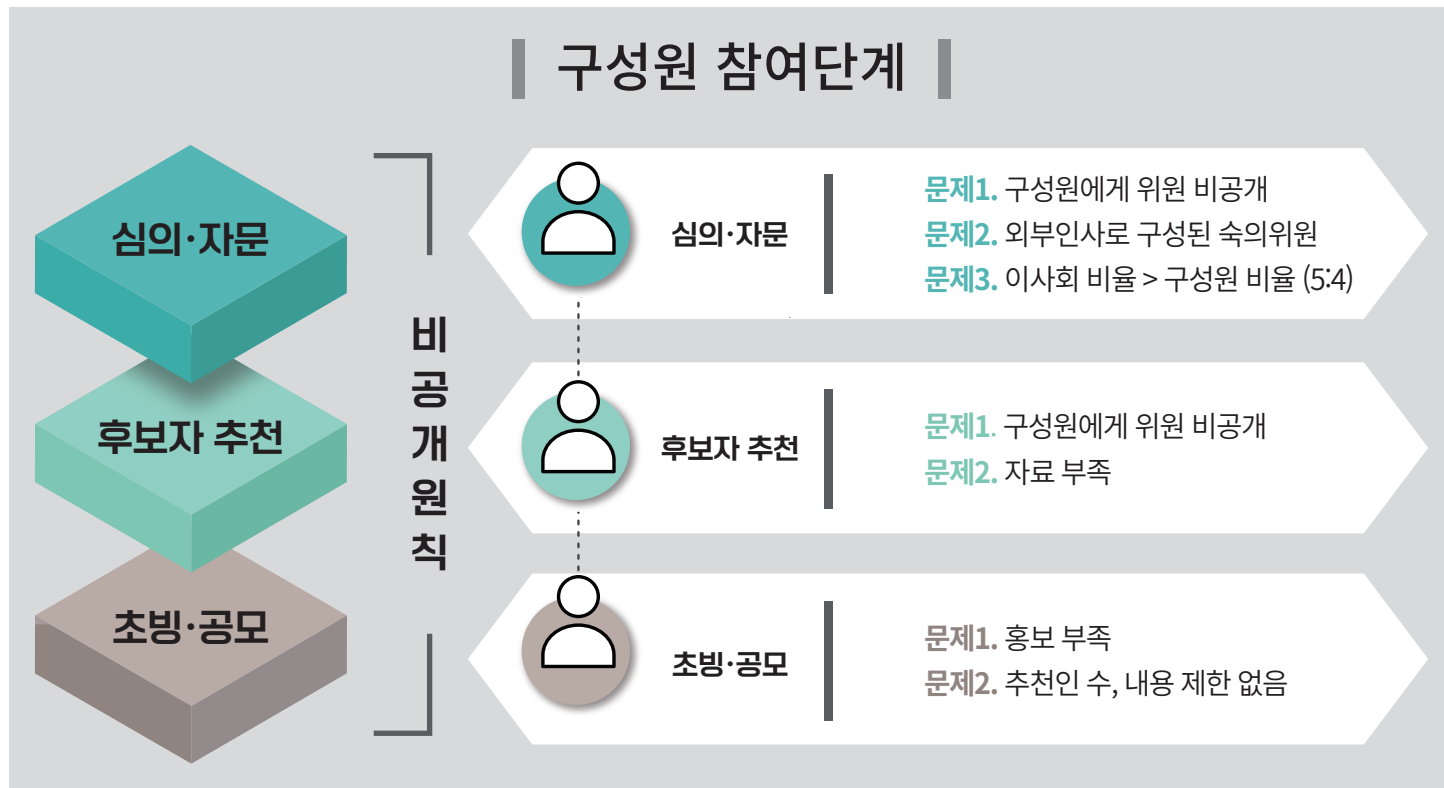
우리학교는 4년을 주기로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나 시대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올해는 '학생의 자율성 강화'라는 교육부의 기준에 맞춰 개편이 이뤄졌다. 전공과 교양 모두에서 이수 학점이 축소돼 졸업 학점이 감소했다.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되는 현 강의평가의 제도의 한계를 짚어본다.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대학주보

‘비공개 원칙’, 구성원 참여 수준 낮춰



제16대 총장 선임부터 시작된 구성원 참여는 구성원이 총장 선임에 민주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비공개 원칙'과 더불어 세부적인 선임 방식을 전적으로 법인이 결정한 것 역시 구성원 참여를 도입한 취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제17대 총장 선임과정이 구성원 참여를 제한해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 총장 선임과정에서는 구성원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인은 후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에서 총장 선임과정 전반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초빙·공모 단계로 추천된 후보자 17인 명단뿐만 아니라 후보의 정책이나 비전, 선임 과정에 참여한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총추위원)과 총장숙의위원회 위원(숙의위원)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구성원이 후보의 정책이나 비전을 직접 들을 기회도 없었다. 구성원은 행정지원단의 메일로만 각 단계의 진행 경과를 통보받을 뿐이었다.

이번 선임과정의 총추위 단계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해 '자질을 검토하는데 난항을 겪었다'는 것이 총추위원들의 중론이

다. 다만 비공개 원칙으로 구성원은 선임과정 중 후보자 자료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조차 없었다. 총추위원 A씨는 "후보자 자료가 너무 부족했다"며 "별도 요청을 통해 총장 후보 추천 수락 사유와 총장으로서 펼치고자 하는 정책 등을 포함한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총추위원 B씨는 "추가로 받은 자료도 2~3장 분량의 자기 추천 수준 내용이었다"며 "구성원 대부분이 기업이나 대학의 신입직원 채용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숙의위원 자격에서도 충족하기 힘든 조건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숙의·자문 단계는 총장 선임과정 중 구성원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단계이기에 구성원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인은 '국내외 선도 고등교육·학술기관 기관경영 유경험자'만이 숙의위원이 될 수 있다고 설정했다. 하지만 '선도'와 '기관경영' 기준이 모호했고 학생 숙의위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이 존재하기 어려운 모

순도 존재했다. 또한 각 구성원 단체는 각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를 추천했지만 법인은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반려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따라서 숙의위원은 1개 단체를 제외하고 모두 우리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또한 숙의위원 9명 중 법인 이사회 인사가 5명을 차지해 구성원 인사보다 많은 수를 차지했다.

총추위원 A씨는 "해당 요건으로만 본다면 국내외 대학이나 학술기관의 부총장 이상의 직위를 역임하고 있거나 역임한 분들로 해석돼 그 자격이 교원으로만 한정될 소지가 있어 교내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총추위원 C씨 또한 "내부 인사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고 말했다. 총추위원 D씨는 "숙의 과정이 가지는 의미는 더 다양하고 깊은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것"이라며 "후보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숙의위원으로 추천돼 형식적인 검증만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전했다.

제16대 총장 선임부터 시작된 구성원 참여는 구성원이 총장 선임에 민주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비공개 원칙'과 더불어 세부적인 선임 방식을 전적으로 법인이 결정한 것 역시 구성원 참여를 도입한 취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구성원은 무엇보다 준비 과정과 기간의 중요성을 과렷했다. 총추위원 B씨는 "법인은 총장 선임 절차가 약 1년간 진행됐다고 하지만 구성원이 체감하는 기간은 4개월 정도"라며 "9월 이전까지는 법인 단독의 총장선임제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었고 제도의 검증과 소통 기간이 충분했다 보기 부족하다"고 전했다. 총추위원 E씨는 "평의원회에 최초로 총장 선임 관련 안건이 올라온 것도 너무 늦었고, 숙의위원 추천 과정에서 구성원 대표 단체에게 숙의위원의 자격요건 안내를 해준 시점도 늦었다"며 "오랜 시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선임에 임박해 선임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사무적으로 진행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소회를 밝혔다.

‘편입감독 하술’ 주장 거짓판명

장해린 기자 sunblessyou@khu.ac.kr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우리학교 일반 문과 편입 지필고사 관리감독 논란(일반 편입시험 감독 논란/대학주보 1715호 1면/2024.01.10.)에 작성자가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작성자는 영어 편입학 필답고사 중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원문을 검색해 부정행위를 했으며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작성자는 해당 편입시험 응시자가 아닌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리·감독에 의문을 제기했던 인터넷 글을 보고 자신이 지어낸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

입학처는 "글에 언급된 문제를 교수진과 검토한 결과, 화장실을 이용하는 짧은 시간에 단어 검색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확인했으며, 허위 사실 글을 올려 입시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경희대 이미지를 실추시킨 혐의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수거와 금속 탐지기 여부에 대해서는 "편입학 시험에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가방에 넣게 하고, 이후 몸에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 시 부정 행위자로 간주해 퇴실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몸에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는 경우 퇴실처리 한다고 고지 후 시험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입학처는 향후 계획에 "시험 전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안내하고 고사 중 화장실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남부 진행 요원을 배치하고 금속 탐색기 검색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여 더 공정한 관리가 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